

입틀막 대전시교육청 규탄한다!

<청소년 활동가 입틀막 대전시교육청 규탄 긴급 기자회견>

2026년 07월 07일(화) 11시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문

진행 안내

평등문화약속문 낭독

발언 1 : 신민기 - 정의당 대전시당

발언 2 : 서영 - 대전청소년모임 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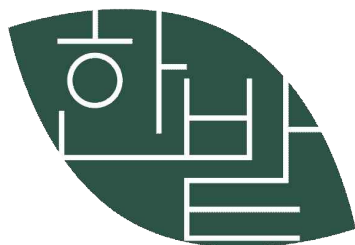
발언 3 : 김상임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

발언 4 : 금강 - 전국청소년노동조합

발언 5 : 김재섭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기자회견문 낭독

정리 및 항의서한/질의문 전달



대전청소년모임

취소된 것은 청소년이 세상을 바꾼다

평등문화약속문 낭독(기자회견ver.)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시민들은 평등한 기자회견 진행을 위하여 시작 전, 아래와 같이 낭독을 하고 진행하도록 합니다.

1. 함께 연대하며 나이, 성별, 성별정체성, 성지향, 혼인여부, 학력, 병력 여부, 혼인 및 출산 여부, 출신 지역 등 여러 이유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한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2.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며 평등한 관계임을 기억합니다.
3.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상호 동의없는 반말을 사용하지 않고 경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4.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발생하는 평등 문화 및 인권을 침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아닌 공동으로 대처합니다.
5. 나이, 성별, 성별정체성, 성지향, 혼인여부, 학력, 병력 여부, 혼인 및 출산 여부, 출신 지역 등에 관한 차별적인 발언이나 고정관념이 담긴 말과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6. 상대방이 원치 않는 발언,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7. 외모, 나이 차별적인 발언을 주의합니다.
8. 사회적 소수자(성소수자, 청소년, 장애인 등)에 관한 차별적인 발언은 하지 않습니다. 발언을 한 경우에는 발언에 대해서 항의 하고 경고합니다.
9.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아랫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10. 기자회견 진행 중 평등문화를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즉시 중단하고 공동으로 대처합니다.
11.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진행자는 혐오발언 또는 행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제지하고 경고해야 합니다.
12.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진행자는 나이, 성별에 관계 없이 모두가 참여할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발언 1 : 신민기(정의당 대전시당)

추가 예정

발언 2 : 서영(대전청소년모임 한발)

지난 7월 1일, 민선 9기 대전 교육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당연히 교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대전 교육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화합의 장이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취임식 현장에서 우리 목격한 것은, 교육의 가치를 실현해야 할 교육청이 오히려 민주주의의 기본인 '소통'을 폭력적으로 짓밟는 장면이었습니다. 새로운 정책에 대해 정당하게 우려를 표하던 한 시민의 목소리를 행정력을 동원해 강제로 묵살하고, 그를 행사장 밖으로 거칠게 끌어내는 모습은 우리에게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는 오석진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교권신장담당관' 신설 정책이 얼마나 일방적이고 위험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이 꿈꾸는 학교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드라마 속에서나 보던, 물리력으로 학생을 제압하고 공포로 현장을 통제하는 '교권보호국'을 대전 교육에 그대로 이식하겠다는 것입니까? 교권을 신장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름만 바꾼 '교권신장담당관'을 신설하는 것은, 결국 학교 현장을 대화와 상생이 아닌 감시와 분열의 공간으로 변질시키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문제를 지적하는 시민을 취임식장에서 거칠게 끌어내고 입을 막았던 교육청의 모습은, 그들이 추진하는 정책이 결국 어떤 방식으로 현장을 통제할지 똑똑히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습니다. 드라마 속 가상의 기관처럼 힘과 권위로 누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알팍한 행정 편의주의는 교육 현장을 사법적 분쟁과 갈등의 늪으로 몰아넣을 뿐입니다.

현장의 깊은 우려를 조율하려는 노력은커녕, 비판의 목소리마저 힘으로 치워버리기에 급급했던 대전교육청의 행태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마저 의심케 합니다. 비판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아서는 교육 행정은 결국 교육 수장의 독단만 남는 죽은 행정이 될 뿐입니다.

오석진 교육감과 대전시교육청은 이번 사태가 대전 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과오임을 인정하고, 갈등만 부추기는 정책 기조를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전시교육청에 엄중히 요구합니다.

하나, 학교 현장을 드라마 속 통제 기구처럼 변질시키는 '교권신장담당관' 신설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취임식장에서 발생한 강압적인 의사 표현 차단과 강제 퇴장 조치에 대해 행정 책임

자로서 즉각 사과하라!

하나, 일방적인 통제 중심의 행정을 멈추고, 모든 교육 주체가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라!

우리는 일방적인 행정 편의주의와 권위주의로 얼룩진 대전 교육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석진 교육감이 독단적인 태도를 버리고 민주적인 교육 행정으로 돌아설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감시와 비판을 이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3 : 김상임(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 지부장 김상임입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 오후 3시, 오석진 교육감 취임식 현장에 있었습니다.

노동조합으로서는 처음으로 공식 초청을 받아 지정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자리이자 앞으로 4년간 대전교육의 정책과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였기에 저 역시 기대를 갖고 교육감의 취임사를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취임식 도중 성령 청소년 활동가는 교권보호국 신설에 대한 우려를 담아 오석진 교육감에게 짧게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불과 몇 초간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교육청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활동가를 거칠게 제지했고, 피켓을 빼앗아 부수며 행사장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바로 눈앞에서 지켜봤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럽고 참담했습니다.

취임식은 교육감만의 행사가 아닙니다. 대전교육에 관심을 가진 시민이라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자리이며,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물론 축하의 자리에서 불편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힘으로 막고 폭력적으로 제압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은 오석진 교육감의 취임사였습니다.

교육감은 분명 "보다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몇 초간의 문제 제기조차 허용하지 않는 것이 낮은 자세의 소통입니까?

비판의 목소리를 힘으로 제압하고 경찰까지 부르는 것이 교육감이 말한 소통입니까?

오석진 교육감께 요구합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시민과 교육공동체 앞에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고 공개적으로 사과하십시오.

시오.

그리고 취임사에서 약속한 '낮은 자세의 소통'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장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석진 교육감께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십시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는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존중되는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지켜보고 행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4 : 금강(전국청소년노동조합)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 모여주신 여러분, 저는 전국 청소년 노동조합 부위원장인 금강입니다. 이번 대전 교육청 ‘입틀막’사건에 분노하고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1일, 오석진 교육감의 취임식에서 대전 청소년 모임 한발은 참교육식 교권보호국 정책을 내세운 오석진 교육감을 향해 피켓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전교육청과 오석진 교육감은 평화롭게 시위하던 대전 청소년 모임 한발 활동가인 성령 활동가의 팔을 강제로 붙잡고 강제로 퇴거했습니다. 성령 활동가는 퇴거당하는 와중에도 오석진 교육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팔을 놓으라는 의사를 밝혔으나 대전교육청은 이를 무시하고 성령 활동가를 강제로 퇴거시켰습니다. 성령 활동가가 퇴거당한 후, 오석진 교육감은 “교권보호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권을 보장하는 일”이라며 청소년의 목소리에 가장 귀를 기울여야 할 교육감이 청소년의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는 일이라면서 교권보호국을 신설하는 오석진 교육감, 반대 의견을 내는 청소년을 폭력으로 진압한 것이 당신네들이 말한 인권보장입니까? 오석진 교육감은 자신의 행동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꼭 사과하시길 요구합니다. 또한 대전교육청에서도 이러한 폭력을 인지하고 사과를 하고 더이상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십시오.

저희 전국 청소년 노동조합은 이러한 대전교육청의 폭력과 오석진 교육감의 행보를 강력히 규탄하며 대전교육청과 오석진 교육감에게 재발방지 약속과 진실된 사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저는 교권보호국이 생기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입장이며, 오석진 교육감은 참교육식 교권보호국 발언을 철회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전국 청소년 노동조합 부위원장 금강이었습니다.

현재 대전시는 만 15세 미만 청소년의 타슈 이용을 조례와 약관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 3월 조례로 바뀐 규제가 시대의 흐름과 시민의 이동권에 역행하고 있음을 대전시는 알아야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탄소 중립은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대전시가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꿈꾼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동차 중심의 도시 구조를 대중교통과 자전거 중심의 구조로 재편하는 것입니다. 자전거는 버스나 지하철과 연결되어 대중교통 수단 중 하나입니다. 대중교통의 활성화에는 나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청소년 시기부터 자전거를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선택하고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15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친환경 이동 수단에서 배제하는 것은, 탄소 배출이 없는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그 실천의 통로는 막아버리는 모순된 행정입니다.

대전시는 안전을 이유로 청소년의 자전거 이용을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역할은 위험하니 타지 말라고 막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탈 수 있을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제가 아닌 도로 구조의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동안 도시 설계는 철저히 자동차 중심이었습니다. 이제는 자동차 도로를 줄이고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를 확충하는 '사람 중심'의 도시 설계가 필요합니다.

자전거 도로의 확충과 보도의 안전성 확보는 단순히 청소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턱이 없고 넓으며 안전한 자전거·보행로는 유아차를 끄는 부모,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걸음이 느린 어르신 등 모든 이동 취약계층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청소년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시는, 곧 대전 시민 누구라도 안전하게 거닐 수 있는 도시임을 의미합니다.

청소년 역시 대전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도시의 인프라를 누릴 권리가 있는 시민입니다. 획일화된 타슈가 아닌 여러 신체 조건에 맞는 타슈 도입도 검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과 연계한 실질적인 자전거 안전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전거 보험 혜택을 사각지대 없이 확대해야 합니다. 이렇게 규제로 공공서비스에서 배제하는 편의주의적 행정이 아닌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대중교통의 활성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대전시의 공영자전거 '타슈'가 대전 시민 모두를 위해 존재 하길 바랍니다.

발언 5 : 김재섭(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안녕하십니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김재섭입니다.

대전 교육행정이 권위주의적이고 불통인 12년을 지나 새로운 교육감이 취임하자마자 지난, 아니 설동호 교육감보다도 후퇴한 교육행정을 우려할수 밖에 없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합니다. 취임식장 앞에서 피켓 하나 들고 서 있던 청소년이, 교육청 공무원들의 손에 끌려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 청소년이 요구한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도 서로를 적으로 만들지 말자는 것. 통제와 분리가 아니라 신뢰와 협력으로 학교를 만들어달라는 것. 그 평범하고 정당한 요구가, 대전 교육의 첫날부터 폭력으로 응답받았습니다.

이번 일을 단순한 우발적 사고로 보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오석진 교육감은 선거 운동 기간에 주민들에게 거수경례를 하는 퍼포먼스를 반복해왔습니다. 경례는 상급자와 하급자, 명령과 복종으로 짜인 군사 문화의 언어입니다. 시민과 후보자는 명령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는 유권자 앞에서 경례를 함으로써, 자신과 주민의 관계를 수평적 시민 관계가 아니라 상명하복의 위계 구조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준 셈입니다. 놀라운 것은 경례를 하던 사람이 선거가 끝나니 경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점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에게, 자신의 취임식장에서 명령 체계 밖에 서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청소년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대화해야 할 시민이 아니라,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항명'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 대신 물리력이 동원됐습니다. 이번 강제 퇴장은 실수가 아니라, 그가 정치 퍼포먼스로까지 체화하고 있던 군대식 위계 문화가 취임 첫날 교육 행정 현장에서 그대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목소리를 내려던 청소년은 권한도 없는 장학사들에게 물리적으로 끌려나가는 모습을 우리 모두 목격했습니다. 교육감과 시민의 관계는 상급자와 부하의 관계가 아닙니다. 대전 교육의 수장은 명령

을 내리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과 마주 앉아 대화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저는 물리력을 동원한 장학사들이 권한없이 폭력을 행사했다고 봅니다. 그들에게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대전청소년모임 한발, 그리고 끌려나갔던 그 활동가와 연대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잊지 않고 계속 함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대전시교육청의 청소년 활동가 폭력적 '입틀막'을 규탄하며, 일방적인
'교권신장담당관' 제도 추진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지난 7월 1일, 오석진 교육감의 취임식장에서 참담하고 폭력적인 사태가 발생했다. 대전시교육청의 '교권신장담당관' 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하며 1인 피켓팅을 진행하던 청소년 활동가 '성령'을 향해, 교육청 직원으로 추정되는 비청소년 남성이 달려들어 폭력으로 진압한 것이다. 이들은 홀로 목소리를 내던 청소년 활동가의 피켓을 빼앗아 훼손하고, 팔을 강제로 붙잡아 취임식장에서 폭력적으로 끌어냈다.

민주시민교육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이야기해야 할 교육청에서, 그것도 교육감 취임식이라는 공적인 자리에서 시민의 평화로운 의사 표현을 물리력으로 짓밟은 것에 대해 우리는 분노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진보당 김선재 입틀막, 카이스트 신민기 입틀막에 이어 오석진 교육감 취임식 입틀막까지, 벌써 대전에서만 세 번째 발생하는 입틀막 사건이다. 권력에 이익을 제기하는 목소리를 폭력으로 지워버리는 이 야만적인 행태가 대전 지역의 표준이 되어버린 것인가?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활동가를 폭력적으로 퇴거시킨 직후 오석진 교육감이 남긴 발언이다. 그는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교권 보호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권을 보장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학생의 입을 틀어막고 팔을 꺾어 끌어내면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인가? 오해는 우리가 아니라 오석진 교육감이 하고 있다. 구성원의 목소리를 폭력으로 억압하며 시작된 제도는 결코 교육공동체 누구의 인권도 보호할 수 없다.

우리가 교사의 노동권과 안전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무너진 교육 현장을 회복하고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교권 침해의 명확한 기준,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의 범위를 제대로 규정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교권신장담당관'이라는 감시 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는 결국 학생과 보호자, 교사를 대립시켜 교육공동체가 서로를 감시하고 고발하게 만드는 심각한 부작용과 갈등만을 초래할 것이다. 무엇보다 오석진 교육감은 이 중대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토론회나 공론화 절차 등 최소한의 민주적인 의견 수렴 과정조차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교육의 주체인 청소년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만들어지는 정책에 우리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이에 오늘 기자회견을 공동 주최한 우리 단체들은 오석진 교육감과 대전시교육청의 반민주적이고 폭력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오석진 교육감은 청소년 활동가에 대한 폭력적 퇴거 조치(입틀막)에 대해 직접 나서서 공식 사과하라!

하나, 교육공동체 간의 감시와 갈등을 조장하고, 민주적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교권신장담당관’ 제도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교사의 노동권 보장과 학생의 인권이 함께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학생을 포함한 교육공동체

모두가 참여하는 민주적 공론화 기구를 즉각 구성하라!

우리는 대전시교육청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회복할 때까지, 그리고 교육공동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교육 현장 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연대하며 싸워나갈 것이다.

2026년 7월 7일

기자회견 공동주최 단체 일동